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312호 (음력 2월 26일)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장성군, 타 지역 위탁한 돼지분뇨 '나 몰라라'

## 허가 후 5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반출 여부 확인 안 해

## 축사악취 골머리 주민 민원 해결, 결국 탁상행정에 그쳐

본지가 확인한 무안군 개인위탁처리업체. 농가가 장성군에 위탁처리하겠다고 제출한 업체의 주소는 서류상과 달랐다. 하지만 장성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장성군은 농가가 위탁처리 서류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장성군이 농가가 돼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타 지역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내줬지만 이를 지키는지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위탁처리 업체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은 지난 2017년 A면에 신규로 돼지 축사를 허가했다. 애초 장성군은 허가 신청에 대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예정 부지의 경계 기준 132m, 건축물 기준 153m 거리에 30여 명이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를 처분했지만, 농가의 행정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결국 농가는 허가 신청을 했으며 발생하는 돼지분뇨 등을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맑은물사업소) 등 장성지역이 아닌 무안군의 개인업체에 처리하겠다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직선거리로 56km 이상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것.

허가신청을 받은 농가는 2019년 4·5월 무렵 축사공사를 마쳤고 돼지 입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해당 농가는 애초 장성이 아닌 무안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농가는 사육이 시작된 지 10개월 후, 무안지역이 아닌 장성지역인 맑은물사업소와 2곳의 시설에서 위탁처리하겠다는 변경신청서를 냈으며 장성군이 이를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관계자는 변경사유에 대해 "무안보다 장성지역에서 하는 비용이 저렴해 변경신청을 하게 됐다"며 "장성군이 변경신청을 받아줬다"고 말했다.

장성군도 "처리신청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을 받아줬다"고 밝혔다.

결국 장성군이 돼지사육 농가가 애초 신청한 무안군에 돈분 등을 위탁 처리했는지를 최초 허가일부터 5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시인한 것이다.

여기에 장성군은 무안군청에 위탁처리업체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처리능력은 되는지 △신청 허가 신청을 한 농가에서 돈분 등의 반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무안군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 전·후로 장성군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무안군 소재 업체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처리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온다"며 "해당 업체는 처리한 액비(물거름)에 민원이 자주 발생해 대표가 구속 중이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에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 서류에서 위탁처리계획에 따른 해당 업체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했다"며 "현지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장성군은 축사 등의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지 않고 그동안 탁상행정만 해왔다는 눈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박재범 기자

# 민주, 지방선거 '인물 가뭄' 속 거물급 출마 요구 '봇물'

## 지방선거 열세 전망 속 "중량감있는 인사 출마" 요구 빗발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낙연·정세균도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울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선 패배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지만 다음 선거 기반을 닦기 위해서라도 중량감있는 인사들이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서울시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우상호 의원은 지난 1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오세훈 현 시장의 대항마로는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우선순위 후보군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야 다음 선거를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물급 인사가 도전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 후 잠행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에 맞서 서울을 지킬 적임자는 송 전 대표"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식 특권정치 대 새로운 민주정치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송 전 대표 차출을 요청했고, 이 글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2030 여성들로부터 집단 소액후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석 달 만에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도 되냐", "인천시장을 하다가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어떻게 비춰지겠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 전 대표도 "당이 고민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27일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악순환을 막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고 적으며 여운을 남겼다.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 속에서 당내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미국행 일정이 확정됐고, 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개인 행보를 고려하면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마 요구가 있지만 지방선거판에 정권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데다, 정계 은퇴를 번복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진 기자

호남신문은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지역현안, 이슈, 비리 등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 ☎ 062-222-2580

# 신규확진 12.5% '9세 이하' 10만명당 발생률 가장 높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9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약 4만명으로 가장 높았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1만8130명 늘어 누적 1181만5841명이다.

이 중 0~9세 연령의 신규 확진자는 전체의 12.5%인 3만9809명으로 집계됐다. 0~9세의 누적 확진자는 148만5301명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확진자 중 신규 및 누적 확진자 비율이 각각 15.2%, 15.5%로 가장 높은 40대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그러나 누적 확진자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0~9세가 3만9499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이어 10대(3만4177명), 30대(2만6483명), 40대(2만2367명) 등의 순이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접종은 일주일 뒤인 오는 31일부터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4차 접종자는 2087명 늘어 누적 25만1940명으로 집계됐다.

4차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고위험군이다.

3차 접종자는 3만4326명 증가한 3262만8796명이다. 전체 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63.6%가 3차 접종을 마쳤다. 12세 이상 기준으로는 69.3%, 18세 이상 73.4%, 60세 이상 89.0%다.

연령별 3차 접종률은 70대 91.4%, 60대 89.5%, 80세 이상 83.9%, 50대 81.1%, 40대 66.2%, 20대 57.8%, 30대 57.1%, 12~19세 17.5%다.

2차 접종자는 1096명 늘어 4447만2607명, 1차 접종자는 1509명 늘어 4494만4253명이다.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86.7%, 1차 접종률 87.6%다.

13~18세(지난해 기준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83.1%, 2차 접종률은 80.3%다.

기동취재본부